

연재기획 - 청년정치는 가능한가

총여 폐지, 새 시대의 성평등인가 학생자치의 자기파괴인가

2부 페미니즘이라는 단절

김수혁 기자 sherk@khu.ac.kr
박창원 기자 macpark342@khu.ac.kr

연재 기획 - 청년정치는 가능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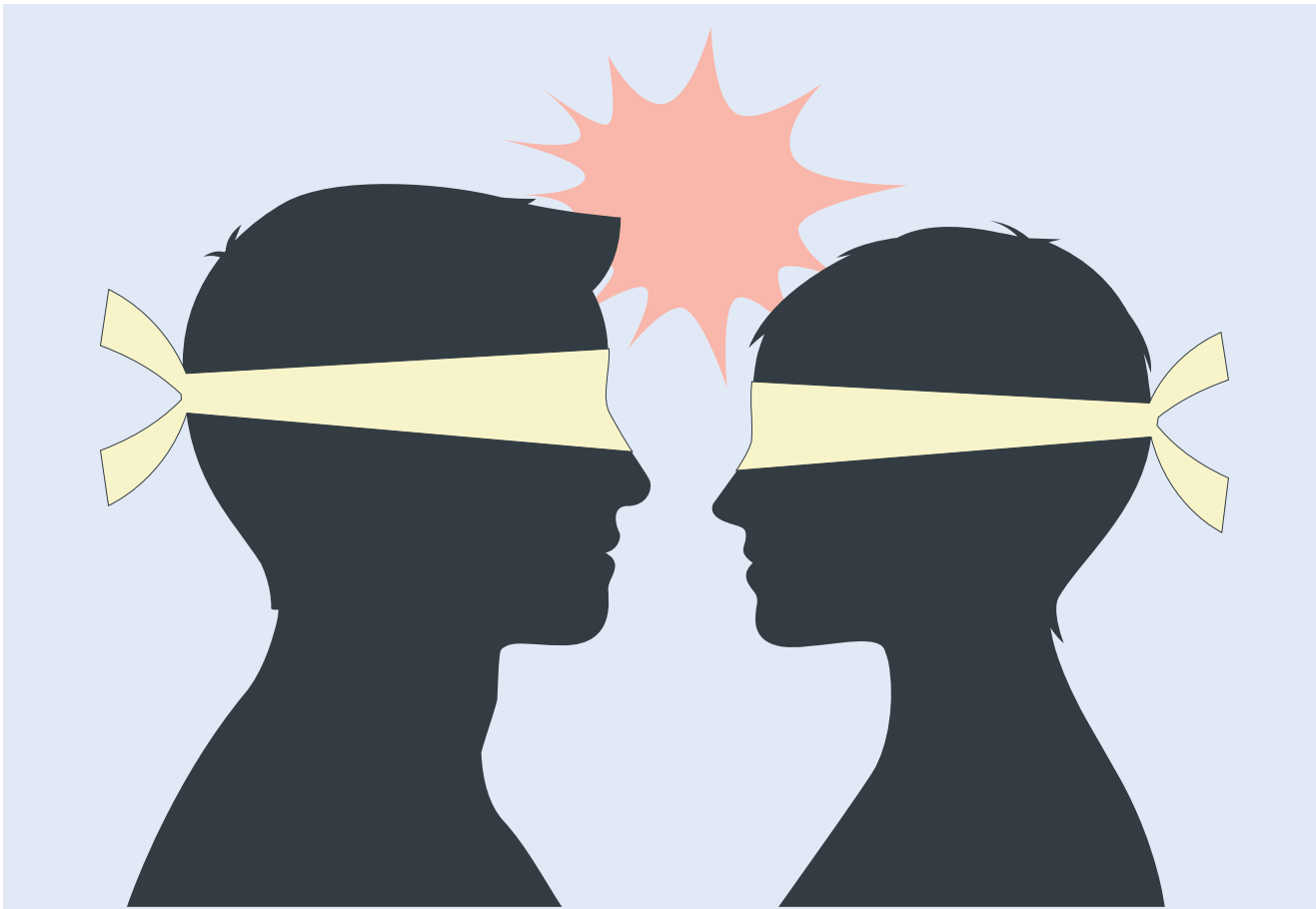
- 1. 청년은 없다
- 2. 페미니즘이라는 단절
- 3. 서울과 대학이라는 경계
- 4. 그럼에도 불구하고

#. 단순한 사건이라기보다는 사회적 현상에 가까워 보이는 총여학생회(총여) 폐지 흐름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내려졌다. 총여 폐지가 한국 사회에 거세게 불고 있는 페미니즘 운동에 대한 백래쉬(Backlash, 특정한 사회 변화에 저항하는 일련의 의식이나 행동)라는 의견, 많은 대학에서 총여의 존재감과 역할이 유명무실해진 결과라는 의견, 학생자치활동이 약화된 결과의 하나라는 의견 등이다. 각자의 근거를 가진 다양한 해석이 암시하듯 문제는 총여 폐지라는 현상 자체보다도 그 기저에서 이 현상을 빚어낸 인식에 뿌리가 있을 것이다.

지난해 치러진 학생 총투표 결과에 따라 연세대 회칙 내 총여 설립근거 조항이 삭제되면서 서울권 대학가에 남아있는 총여의 수는 마침내 ‘0’이 됐다. 앞서 동국대, 성균관대 등이 연세대의 경우와 같이 학생 총투표를 통해 총여 폐지를 결의했고 한양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등 일부는 출마자 부재나 투표율 미달로 총여가 구성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현재 우리학교 국제캠퍼스(국제캠)은 전자에, 서울캠퍼스(서울캠)은 후자에 해당한다.

대학가 총여 폐지로 드러나는 젠더갈등

연세대에서는 지난해 1월 7일 ‘총여 폐지 및 총여 관련 규정 폐기, 후속 기구 신설에 대한 학생총투표’ 결과로 총여 폐지를 결정했다. 앞서 2018년 6월에는 총여 ‘재개편’을 요구하는 총투표가 열려 가결된 바 있다. 같은 해 총여가 자체주관한 인권행사의 일환으로 페미니스트 작가 은하선 씨를 강사로 초빙한 일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소식이 알려지자 학생들 사이에서는 씨가 ‘강사로 초빙하기에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강연 당일 현장 시위, ‘총여 재개편 추진단’ 구성과 서명운동으로 이어졌다(연세춘추, 「강연, 농성, 격론」, 2018년 5월 27일). 이후 총투표로 재개편을 결의했으나 구체적인 재개편 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소통창구 강화, 회칙 정비 등이 논의됐고 2018년 말 30대 총



여가 구성됐으나 얼마 가지 않아 총여 존폐 여부를 묻는 총투표 결과로 연세대 총여는 공식적으로 사라지게 됐다. 동국대에서는 이보다 조금 앞선 2018년 11월 21일 역시 총투표를 통해 총여 폐지를 결정했다. 500인 이상의 서명이 있으면 총대의원회 중앙위원회에 안건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회칙에 근거해 중앙위원회 심의와 총대의원회 주관 토론회를 거쳐 총투표가 결정됐다. 당시 동국대 총여는 투표 결과가 나온 직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 시행의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며 이의제기서를 제출했지만 기각됐다. 당시 동국대 총학 회장이었던 김정도 씨는 “총여 예산이 학생 전 체로부터 받는 학생회비에서 나오지만 투표권은 여학생에 한정돼 있다는 점, 회계관리 부실과 불투명성, 여학생 휴게실 관리와 생리공결제 논의 등 총여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업무에 충실하지 못했던 점 등이 폐지 반대 논거로 제시됐다”면서도 “총여 집행부 인력이 부족해 업무 수행 능력에 한계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과거와 달리 대학에서 여학생은 더 이상 소수자 아냐”

우리학교 국제캠에서는 2018년 4월 28일 김상현(응용물리학 2013) 당시 총여 비대위원장이 확대운영위원회에 직접 총여 폐지 안건을 제청하면서 존폐 논의가 본격화됐다. 김 씨는 당시 “80년 후반 대학 운동권을 중심으로 시작된 총여는 여학생 인권 신장을 목표로 했지만 30년이 흐른 지금 우리학교 뿐만 아니라 많은 대학에서 총여의 주된 역할이 일회성 복지 사업에 머무르고 있다”면서 “총여를 폐지하고 성 인권 문제를 총학 내부 부서에서 담당하게 하는 것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총투표를 통해 알아봐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또, 당시 국제캠 총여는 두 번의 선거 무산으로 김 씨를 제외하면 집행위원이 없는 상황이었다. 이후 반 년 가량을 지지부진 한 끝에 지난해 3월 20일 총투표가 시행되고 ‘존치 반대’가 과반을 넘어 총여 폐지가 확정됐다. 서울캠에서는 총여 폐지 총투표는 없었지만 출마자가 없어 선거가 무산되면서 총여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

여성 차별의 핵심은 남성성을 일반적인 것으로 보고 여성성을 타자화 하는데 있다

‘총여 폐지론’의 근거는 몇 가지 경향으로 압축된다. ‘변화한 시대상에 맞지 않는다’, ‘남녀갈등을 유발한다’, ‘실질적으로 하는 일이 없거나 부실하다’ 등이다. 대학에서 여학생의 절대적인 숫자가 적었던 과거와 달리 현재는 여학생이 억압받는 소수자가 아니라는 인식은 총여 폐지 논의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요소다. 그러나 많은 여성학자들은 이런 인식이 여성차별의 본질적인 특성을 무시한다고 지적한다. 한국여성연구소에서 펴낸 『젠더와 사회』에서 문화인류학자 김현미는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특성이 아닌 사회적으로 구성된 성별이라는 뜻으로서의 ‘젠더’ 개념을 제시한 보부아르의 논의를 소개한다. 여성차별의 핵심적인 작동원리는 남성성을 일반적인 것으로 보고 여성성을 그에 대비되는 것으로 타자화하는데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 과정은 차등, 불평등, 위계화를 내포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이것을 자연의 질서, 신의 창조물, 전통이나 관습, 오랜 문화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젠더를 권력의 문제로 연결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한다. 남성과 여성 사이의 불평등에는 단순히 숫자 문제로 환원할 수 없는 사회문화적 맥락이 있다는 것이다.

엄혜진(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는 “사회적으로 성평등이나 페미니즘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올 때마다 사안만 달라질 뿐 학문적인 차원에서는 매번 같은 설명을 반복하게 되면서 생기는 피로감이 있다”고 말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갤럽)는 지난해 ‘세계 여성의 날’ 111주년을 맞아 ‘성평등(Gender Equality)에 대한 인식 - WIN 다국가 비교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WIN(Worldwide Independent Network of Market Research)’은 세계 각국의 여론조사 업체들이 회원으로 소속된 글로벌 네트워크다.

“다수 표결만으로 정당성을 갖는 것은 ‘게으른 민주주의’”

이 조사에서 한국의 전체 응답자가운데 우리 사회가 ‘남성에게 더 우호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4%, ‘남녀 동등’은 37%, ‘여성에게 더 우호적’은 18%였다. 갤럽은 “한국의 ‘남녀동등’ 응답은 40개국 평균보다 많지만, 다른 나라보다 성별 차이가 큰 편이다”라고 설명했다. 조사에서 한국 남성은 36%가 우리 사회 전반적 분위기가 ‘남성에게 더 우호적’, 25%가 ‘여성에게 더 우호적’이라고 답한 반면, 한국 여성은 53%가 ‘남성에게 더 우호적’, 11%가 ‘여성에게 더 우호적’이라고 답했다. 차이는 19-29세의 응답결과에서는 더 커진다. 한국의 19-29세 남성에서 우리 사회가 ‘남성에 우호적’이라는 응답은 33%, ‘여성에 우호적’이라는 응답은 27%였지만 같은 연령대 여성에서는 같은 질문에 58%와 9%라는 차이가 났다. 한국 사회에서 페미니즘이나 성평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특히 청년층 내에서 남녀 간 인식 양상에 거대한 단절이 포착되고 있다.

연세대 30대 총여 ‘PRISM’은 총투표로 총여 폐지가 결정된 이후에도 지금까지 자체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 민선 총여 회장은 “당선된 지 10일 만에 총여 폐지 총투표 요청이 중앙운영위원회 안건으로 올라왔다”면서 “하지만 우리가 당선됐다는 것은 유권자가 총여에게 기회를 제공한 것이고 우리가 들고 나온 공약이 이행되기를 바라는 목소리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총투표안의 안건 제목이 ‘총여 폐지 및 후속 기구 신설에 대한 안’이었는데 총투표로부터 1년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후속기구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척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역사적, 사회적 맥락 속에 탄생한 조직을 없애는데에는 많은 논의와 후속조치가 선행돼야 한다.

그는 “재개편 총투표 이후 총여 관련 회칙을 정비하고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재개편 TFT가 만들어졌지만 여기서 나온 논의는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다”면서 “총여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결국은 ‘일단 총여를 없애고 보자’는 뜻이 아니었나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한다. 이 씨는 “오로지 다수의 표결만 있으면 정당성을 갖는다고 말한다면 ‘게으른 민주주의’가 적합한 표현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총여는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맥락 속에서 탄생한 조직이고, 그런 조직을 없앤다면 많은 토론과 후속조치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선행됐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합의된 ‘내적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법적구조’의 변경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총여가 사라진 자리에는 ‘진정한 성평등’을 위한 후속기구, 총학 차원의 업무인계 같은 대안이 제시됐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총여의 존폐 여부로 해결되지 않았다. 기자 리영희는 생전, 「강요된 권위와 언론자유」라는 글에서 “문제는 법적구조보다도 정치의 내면정신에 있다”라는 프랑스 정치학자 알렉시스 드 토크빌의 말을 인용하면서 “하나의 국가나 국민의 생활원리가 되어주는 일반적 정치의 내적 정신이 건전하지 않을 때 법적 구조의 건전이란 기대하기 어렵다”고 썼다. 학생자치 내에서 무엇이 이른바 ‘진정한 성평등’인지를 판단할 합의된 ‘내적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총여 폐지라는 ‘법적구조’의 변경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심지어 이 결정으로 우리가 해결책을 접근했다고 믿는다면 그것은 학생자치의 자기파괴를 가속하는 어리석음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